

## 책임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전/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사회학 박사)

### 1. 서언

본 발표는 베트남전쟁<sup>1)</sup>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위 학살의 피해자를 이하 ‘학살 피해자’)의 피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1960년생, 이하 ‘이 사건 원고’)이 202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①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까지 경과와 ② 1심 판결의 쟁점, ③ 1심 판결 이후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반응을 요약·분석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요약하고 쟁점을 드러내는 것이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에 대한 풍부한 분석은 발표 이후 보완할 예정이다.

본 발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1심 판결 법적 쟁점을 다루는 판례 분석(평석)보다는,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운동이 왜 2020년 사법적 방식의 소송이라는 전략/수단을 택했는지를 다루는 사회운동적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이 사건 소송의 대리인이며, 2015년부터 변호사로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에 참여해왔다. 내부자로서 가지는 ‘편향성’도 있겠지만, 내부자이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운동의 맥락과 전략’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함께 서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후자의 위치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운동 20여 년과 그 첨단 쟁점으로서 이 사건 판결을 살펴보겠다.

### 2. 소송의 배경: 2015년 이후 시작된 3번째 국면

#### 가. 1999년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공론화의 첫 번째 국면

- 1) 본 발표에서 “베트남전쟁”이란 1954년 ‘17도선 분할’로서 분단된 베트남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중 국제전 양상이 본격화된 1964. 8.부터 1975. 4. 종전까지 베트남 각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충돌을 지칭한다.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과 같이 지명으로 전쟁을 명명하는 것은 그 전쟁의 맥락과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현재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위 전쟁을 ‘항미항쟁’(Khang Chiến Chống Mỹ, 또는 ‘항미구국항쟁’)이라고 명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베트남전쟁’(The Vietnam Wa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을 특정함에 있어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역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한국전쟁’, ‘아시아-태평양 전쟁’ 등)이기도 한바, 본 발표에서도 일반적 용례에 따라 위 무력충돌을 ‘베트남전쟁’이라고 지칭한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공론화는 1999년 주간지 <한겨레21>에 실렸던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1999. 4. 28.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부터 촉발되었다. 위 보도 이전까지 관련된 논의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었지만<sup>2)</sup>, 위 기사에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있었다는 차별점이 존재했다.<sup>3)</sup> 민주화라는 토양이 쌓여있던 한국 사회는 이 증언에 반응했다. <한겨레21>의 보도 이후 사회적 반향이 뜨거워지자 한겨레신문사는 1999년 10월경부터 ‘부끄러운 역사에 용서를 빌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모금운동을 하였다. 이후 2000년 4월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등 11개 시민사회 단체가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조직하여 심포지엄,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해나간 것이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의 시작으로 평가된다.<sup>4)</sup>

<한겨레21> 통신원으로서 위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 기사를 작성한 구수정은 당시 호치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는데, 2000년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20세기 광기와 야만이 부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그녀는 민간연구자 1인인 자신이 베트남 정부 측 자료와 현지 조사를 종합해 도출한 학살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은 물론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통계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은 처음이었는데<sup>5)</sup>, 파월한국군이 주둔하였던 베트남 중부 5개성<sup>6)</sup>에서 최소한 80여 마을에서 9천여 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구수정, 2000).<sup>7)</sup>

## 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침체기였던 두 번째 국면

피해자들의 증언이 한국 사회에 전해졌고, 전체적인 학살의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으며, 시민사회의 연대와 활동이 이어졌지만, 제도적 변화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 언론에 실린 기사나 칼럼, 시민사회 성명서들의 끝은 비슷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고, 이후 이슈를 끌어갈 시민사회의 역량도 부족했다. 결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은 ‘익숙한 참상’이 되어버렸다.

물론 2000년 전후 이슈화 국면의 성과는 분명했다. 비록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 절차를 시작

- 2) 대표적으로 1990년 7월 <말>지는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 그 역사적 진실”이라는 칼럼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보도를 하였다.
- 3) 위 기사에 담겼던 증언 중 하나다. “‘따이한 군인들이 먼저 스님들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이어서 살려달라며 달아나는 여자 보살님에게도 총을 쏘았지요. 그리고는 시체를 모두 불태웠어요.’ 유엔한의 증언이다. 당시 겨우 15살이던 그는 두려움에 질려 고향도 지르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다고 고백한다”(「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 <한겨레21> 1999. 4. 28.자).
- 4)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Phạm Ngọc Diệu(2006: 42-53) 참조.
- 5) 구수정이 베트남 외무부 국립문서보관실에서 확인하여 필사한, 베트남 인민군대 정치총국 직속 연구소가 1980년대 중후반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남베트남에서 남조선 군대의 죄악’(Tội ác của quân đội Nam Triều Tiên tại miền Nam Việt Nam)라는 문서가 확인되나, 위 문서의 존부나 내용에 대해 베트남 정부의 확인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위 문서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민간인학살의 규모를 5천여 명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6) 성(Tỉnh, 省)은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 7) 이 국면에서 참전군인 측의 입장도 다수 확인된다. 대부분 학살부정의 입장이나 반대의 입장도 존재했다. 사단법인 ‘월남참전전우 사회복지 지원회’는 1999년 12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베트남에 동조하지 않은 양민이 학살됐다면 27만 참전용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우리 역시 피해자이지만, 이것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거나, 공식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1973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수십 년간 비가시화되어있었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사회적 쟁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으로 모였던 시민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었고, 평화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방문(평화기행),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소수 시민단체들에 의한 연대활동은 공론장의 큰 변화나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전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진 못했다. 사회학자 윤충로는 2000년을 전후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이슈가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운동의 확산이나 제도적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베트남전 종전 이후 1999년까지를 ‘1차적 망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를 ‘2차적 망각’이라 분석한다(2015: 31). 1차와 2차에서 각 ‘망각’의 의미가 다른데, 1999년 전까지가 ‘폭력에 대한 망각’이라면,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망각이라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평가다.

#### 다. 2015년 피해자 최초의 방한 이후 시작된 세 번째 국면

세 번째 국면이 시작된 것은 2015년 4월이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5년이 넘어서야 학살 피해자가 한국에 최초로 방문할 수 있었다. 당시 방문하였던 학살 피해자는 응우옌떠런(Nguyễn Tấn Lân, 1951년생, 베트남 중부 빈딩성 빈안 사건의 피해자)과 이 사건 원고 응우옌티탄 2명이었다. 두 학살 피해자들은 1주일 남짓 되는 방한 기간 동안 국회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수요집회 참석, 나눔의집 방문, 대중 간담회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였고,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는 이 자리에 평화를 위해 왔다’며 ‘과거의 제도 속에서 벌어진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한다면 참전군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위로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단순히 물질적 도움이 아닌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응우옌티탄씨도 한국 정부에 대해 ‘민간인 학살의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달라’며 ‘이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up>8)</sup>

피해자들의 방한과 그들의 적극적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더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독보적인 활동을 이어오던 구수정을 중심으로 ‘한-베 평화재단’이라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사회단체가 2016년 한국 내에 설립되었다. 비슷한 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10여 명의 변호사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의 제도적 해결, 즉 한국 정부의 공식적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베트남전 연구모임’을 결성하였고, 2017년 4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민변 내 공식기구로 승인되었다. 법률가 집단 내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을 상설적으로 하는 단위가 만들어진 것은 최초였다.

다시 시작된 공론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의 등장, 그리

8)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반성이 먼저”, 「뉴스1」 국회인터뷰

고 법률가들의 집단적인 참여가 결합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운동의 '제도적 시도'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진상조사, 사과, 피해회복 논의가 담론과 여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 국면에서는 한국 내의 제도적 절차를 이용해 정부의 입장과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가시적 시작점은 2108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었다. 시민평화법정은 2000년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롤모델로 하여, 가해국의 수도에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이었다. 민사재판(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학살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였다. 원고 2명 중 1인은 1차 방한 때 초청되었던, 이 사건 원고 응우옌티탄이었고, 다른 1인은 하미 마을 사건<sup>9)</sup>의 생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1957년생)이었다(두 명은 동명이인).<sup>10)</sup> 이 두 명의 학살 피해자는 시민평화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학살과 고통, 대한민국에게 바라는 바를 진술하였으며, 시민평화법정 재판부가 선고한 승소판결(풍니·하미 사건이 증거로서 인정되고, 이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듣고는 활짝 웃으며 기쁨을 표현했다(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2018; 임재성, 2018a).

시민평화법정은 민간법정이기에 당연히 구속력 있는 판단이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행사 3일간 연인원 1천 명에 가까운 이들이 참여했을 만큼 주목도가 높았다. 2015년 1차 방한 이후, 학살 피해자의 2번째 방한이라는 점, 피해자가 국가책임을 묻는 활동의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언론보도의 양이 상당했음을 물론 물론 담론의 수준도 깊어졌다.<sup>11)</sup>

## 라. 세 번째 국면의 제도적 시도들

2018년 시민평화법정 이후의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시도들은 ① 진상조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 ② 2019년 피해자 103명의 청원과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 ③ 2020년 이 사건 소송이 있다. 특히 ②, ③의 경우 베트남 피해자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 내 제도적인 절차의 문을 두드렸고, 그 과정을 한국 시민사회가 지원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먼저 특별법 발의에 관해 살펴보면, 20·21대 국회에서 각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건씩 발의되었다. 20대의 경우 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로 2020. 4. 3. 발의되었다(의원 10명 공동발의, 의안번호 24834).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 만에 첫 특별법 발의였지만, 임기 말 직전의 발의였고 입법을 위한 특별한 활동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sup>12)</sup> 21대의 경우

9)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제5대대 제26중대가 1968. 2. 24. 베트남 팡남(Quảng Nam)성 디엔반(Điện Bàn)현 디엔즈엉(Điện Dương)사 하미테이(Hà My Tây) 마을에서 마을 주민 약 135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하미 마을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성훈(2018), 권현익(2012) 참조.

10) 시민평화법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2018), 임재성(2018a) 참조.

11) 시민평화법정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 내부에서 확인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피해자 재현의 변화에 관해서는 임재성(2018b) 참조.

12) 정의당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표발의 의원실 쪽에서 언론보도 등 공론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발의 이후 통상 진행하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법안 발의에 당시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는데, 이로 인해 발의 이후 곧바로 진행된 총선에서 많은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베트남전 참전군인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3. 2. 22. 발의되었다(의원 25명 공동발의, 의안번호 2120205). 21대 법안의 경우 2023년 5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발의된 두 특별법 내용은 유사한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 위원회는 조사 이후 종합보고서 작성, 대한민국 정부가 학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법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단계적 진상규명’을 전제로 1단계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한국 정부의 단독조사를 1단계,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공동조사를 2단계로 상정하고, 먼저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한국·미국 등 국가의 문헌자료, 참전군인 조사, 희망자에 한해 베트남 피해자를 임의 조사하는 내용이다. 자국 군인의 위법행위를 해당 국가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의무라고 할 것이다. 오랜 시간 자국 군대에 의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외면한 의무를 비로소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위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1단계 진상조사가 베트남 정부와의 공동 조사 절차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음으로 학살 피해자들의 청원에 관해서 살펴보면, 학살 피해자 103명은 2019. 4. 4.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청원을 제출했다. 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법률(청원법)에 근거해 공식 절차를 통해 구체적 요구를 한 것은 2019년 청원이 최초였다. 학살 피해자 103명은 청원서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날인했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했으며, 자신이 목격하거나 들은 한국군에 의한 구체적인 학살을 기재했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한국 정부의 ①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② 공식 사과, ③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였다. 위 청원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2019년 9월 9일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았으나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민간인학살은 확인되지 않았고, 진상조사 역시 실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 공론화 이후 20년 만에 최초로 확인된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은 학살은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13)</sup> 이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는데, 다른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서는 조금의 진전도 없었다.

위 청원의 요구에는 ‘학살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해달라’라는 부분도 있었다. 마침 포괄적 과거사 조사기구인 진화위가 2020년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해 제2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어진 풍니 사건 만큼이나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졌고, 학살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사회와 깊은 연대를 나누었던 하미 사건 피해자·유족 5명이 2020년 4월 하미 사건의 진실규명을 진화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위 신청 이후, 진화위는 이례적으로 신청접수 2년이 넘도록 조사를 개시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운동의 세 번째 국면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시도로서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소송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상세히 다루겠다.

---

법안에 정의당 의원 중 일부 의원(장혜영 의원, 강은미 의원)만이 발의에 참여했는데 이는 이전 발의 과정에 대한 당내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3) 한국 대통령들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된 구체적 발언은 없었다. 위의 청원 회신이 한국 정부 최초의 공식적 입장이었다.

### 3. 이 사건 소송 경과

#### 가. 풍니 사건 및 이 사건 원고 관련 사실관계

풍니 사건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팡남성에 위치한 풍니(Phong Nhi) 마을<sup>14)</sup>에서, 마을을 수색하던 한국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이하 ‘이 사건 1중대’)가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한 사건이다.<sup>15)</sup> 현재 풍니 마을에는 2004년 한국 시민단체가 한국인들의 성금을 모아 건립한 위령비가 있는데, 비에는 “베트남 민간인들이 남조선 군인들에 의하여 68년 2월 12일에 학살되었다”라고 새겨져 있다. 위 사건으로 학살된 이들의 명부도 위 위령비 뒤편 별도의 비문에서 담겨있다.

이 사건 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은 사건 당시 8세였고, 이 사건 1중대 소속 한국 군인들에 의해 복부에 총격을 입었다. 엄마와 이모, 누나, 동생, 사촌동생 역시 같은 날 한국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녀는 창자가 밖으로 쏟아질 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한국군이 떠난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마을로 진입한 미군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났다. 8세 아이는 10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했다. 이후 그녀는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한 전쟁고아로 살았다. 그녀는 공부하지 못한 유년기를 한스러워하고, 성장과정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한다. 그녀가 어린 시절 밤이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다.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고, 풍니 사건을 다룬 미군 측 자료가 확인되면서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풍니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는 그때 풍니 마을을 찾은 한국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후 계속된 연대 속에서 그녀는 2015년 최초로 방한한 피해자가 되었다. 2018년 시민평화법정의 원고로, 2019년 103명 청원인 중의 1명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매번 진실과 사과를 요구했고 자신이 겪었던 피해와 고통을 증언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그 누구의 사과도, 진실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그래서 응우옌티탄은 2020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절차를 통해 학살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받고,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였다.

#### 나. 이 사건 소송의 사회운동적 고민

이 사건 소송은 2015년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세 번째 국면인 제도적 운동 국면에서 실행된 기획소송이자 공익소송이다. 민변을 중심으로 한 법률가 집단이 대리인단으로서 소송 내적인 법적 논리와 증거확보를 담보했고, 한-베 평화재단을 중심으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 외적인 실무적 지원을 해나갔다.

---

14) 풍니 마을은 1968년 당시 행정구역에 의하면 팡남(Quảng Nam)성 디엔반(Điện Bàn)현 주이 쑤옌(Duy Xuyên)사의 작은 마을로서,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Đà Nẵng)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5km 지점, 다낭(Đà Nẵng)으로 향하는 디엔반(Điện Bàn)현 1번 국도 부근이다.

15) 위 사망자에는 같은 날 풍니 옆 마을인 풍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 벌어진 국가폭력 문제를 통칭하는 ‘과거사 사건’의 경우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거나 권리회복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적 절차의 경우 해당 절차에 참여한 피해자만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가진다. 사법절차에서 증명책임이라는 문턱을 피해자 개인이 온전히 짊어져야 해서 공적 기관의 진상조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문턱을 뛰어넘기도 쉽지 않다. 그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 등 법적 쟁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부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폭력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인식(효과)마저 발생한다. 즉 사법부 판단(소송의 승패)으로 운동의 성과나 진실성이 좌우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에 대해 여러 경험을 쌓아온 한국의 시민사회의 경우 피해자 개인의 소송과 함께 제도를 통한 대안적 진실규명이나 피해 회복도 유력한 과거사 청산의 방식으로 추구해오고 있다.

위와 같은 고민은 세 번째 국면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운동 역시 나누고 있었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회운동의 방식으로 2018년 시민평화법정을 실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민이었다. 현실 법정의 논리와 공간에 갇히게 되는 실제 소송 이전에 대중적인 공간에서 당시까지 운동이 모은 주장과 증거를 펼쳐 사회적 흐름을 만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소송을 이어가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운동의 주체들은 정부의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는 점, 입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주체들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이라는 기획 소송 전략을 고안하면서, 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적극 고려했다. 먼저 여러 학살을 사건화하기보다는 민사재판의 입증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건에 한정했고, 그것이 20여 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가 증거와 진술을 축적한 풍니 사건이었다. 또한 소송의 원고 역시 수십 년째 일관된 진술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 원고 1인으로 한정했다. 피해 최소추정치가 90여 개 마을의 학살, 1만여 명의 희생자이지만 사법적 절차에서 증거를 통해 학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해, 학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한국 정부와 사회에 ‘학살은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자는 전략이었다. 이 공식적 판단으로 전체 학살 사건과 피해자를 위한 사회변화를 추동한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소송만으로 운동을 한정되거나 소송이 운동을 대표하지 않기 위해 운동의 주체들은 노력했다. 소송과 판결에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만약 사회적 변화가 추동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건 소송과 판결이 1심의 결과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학살 피해자 1명에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소송이 사회변동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제도적 시도들을 병행했고, 소송에서 다루어진 주장과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이 운동의 담론으로 사회 속에서 활류되도록 노력했다.

#### 다. 이 사건 소송의 절차적 경과

이 사건 소송은 2020년 4월 접수되어 2023년 2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 변론 과정에서 코로나 4단계 등으로 인한 재판지연,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이루어진 공방, 원·피고 주장정리를 위한 기일 속행 등이 이어지면 판결선고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1심 변론 과정에서 3번의 증인신문과 1번의 당사자신문이 진행되었다. 먼저 증인신문은 ① 1968년 2월 12일 풍니 사건 당일 풍니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류진성 당시 이 사건 1중대

2소대원(2021년 11월), ② 풍니 사건을 20년 동안 취재해왔고 이 사건 1중대 소대장 등 참전군인들을 직접 인터뷰한 <한겨레신문> 고정태 기자(2022년 4월)<sup>16)</sup>, ③ 1968년 당시 ‘남베트남 농촌개발단’이라는 국가기구 소속으로 풍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 인근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이후 풍니 마을로 진입하여 사상자들을 구조한 베트남인 응우옌득찌이(2022년 8월) 3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최초의 소송이었기에, 참전군인과 베트남인이 법원에 출석해 증인의 신분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진술하는 것 모두 최초의 ‘사건’이었다.

류진성, 응우옌득찌이는 모두 풍니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50년이 지난 사건의 목격자를, 그것도 군인으로서 작전을 수행한 자와 마을 밖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장면을 지켜봤던 자 모두를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었다. 당연히 이 사건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에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두 증인은 모두 본인의 경험한 사실을 통해 풍니 사건은 한국군(특히 류진성은 이 사건 1중대원이라는 구체적인 특정까지 하였음)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고, 또한 응우옌득찌이는 풍니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 목격한 이 사건 원고의 충격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고정태의 경우 풍니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2000년 이후 이 사건 1중대 소속 소대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이 신문내용의 중심이 되었다. 원고 측은 고정태가 작성한 신문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 측은 신문기사에 기재된 이 사건 1중대 소대장들의 진술은 그것이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대리인들은 위 기사를 작성한 고정태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① 신문기사의 내용이 증인이 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② 기사가 나간 이후 소대장들의 항의나 수정요구가 있었는지, ③ 증인이 청취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고정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1중대 소대장들 모두 풍니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사건 원고 응우옌티탄에 대한 당사자신문도 2022년 8월 응우옌득찌이의 증인신문과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다. 응우옌티탄은 이미 수차례 국내에서 진술했고, 또 소송서류에도 그녀의 진술이 담겨 제출되었다. 그러나 학살 피해자 중 최초로 법정에서 그녀는 본인과 가족의 학살 과정을 다시 한 번 진술했다. 이 사건 원고의 진술 마지막 부분이다. “한국 정부와 참전 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저는 8살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상은 아직도 아픕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를 도와주세요.”

## 4. 이 사건 판결의 쟁점

16) 고정태 기자는 풍니 사건 관련 유일한 단행본(『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풍니·풍넛 학살 그리고 세계』, 『한마을 이야기: 한국, 베트남, 풍니·풍넛 고정태의 기록』)저자이다(고정태, 2015·2016). 한편 풍니 사건의 실질적 사실관계를 다룬 학술 논문은 김종옥(2017)이 있는데, 위 논문은 풍니 마을에 무장 세력의 활동이 활발했고, 한국군에 의한 작전수행이 불가피했다는 논지의 내용이다.



이 사건 판결은 형식상은 ‘일부 승소’이지만, ‘일부 패소’는 자연이자 부분에 대한 것<sup>17)</sup>이기  
에 사실상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군이 비무장 민간인에게 행  
한 불법행위는 증거에 의해 모두 인정되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남용으로 배  
척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원고 응우옌티탄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을 통해 승소  
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살당한 영혼들도 이제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도 기쁩  
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법률적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겠지만, 개별 쟁점에 따른 법률적 전제와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한 분석을 모두  
담는 것은 분량상의 문제 등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쟁점의 확인 정도만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쟁점 중 하나인 ‘대한민국 소속 군인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는지 여부’는 개별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 부분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더욱 그렇다.

#### 가. 원고에게 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주장 : 1965년 9월 5일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된 한·월 군사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  
인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주장.

원고 주장 : 피고가 주장하는 1965. 9. 5. 한·월 군사실무 약정 등은 조약이 아닌 군사 당국  
간 절차합의에 불과하고, 그조차 실효되었으며,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약정인 1969년 개정 약  
정에서는 ‘개인 청구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 사건에 영향이 없음.

재판부 판단 : 한·월 군사실무 약정은 조약이 아니고, 약정에 따른 보상에 대한 합의도 확인  
되지 않는바, “한·월 군사실무약정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실무 약정서 등만으로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국가 간 합의에 따른 배상 방식 외에 피  
해자가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국가배상법 소정 상호보증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주장 :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른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베트남 국민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원고 주장 :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내 본안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 상호보증주의는 반인

---

17)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액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였고, 이 사건 1심 판결은 이 중 ‘손해배상액 30,000,100원과 이  
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3. 2. 7.까지(변론종결일부터 판결선고일)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인용했다. 통상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판결은 변론종결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인정한다는 점  
에도 지연이자 부분의 일부 패소는 법률상 평가이고 실질적 패소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도적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소송에서 상호보증은 인정되어야 함.

재판부 판단 : ‘베트남 민법 제598조,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 제2조 및 제3조, 베트남 제30조, 제48조,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65조, 행정소송법 제299조를 종합하면 베트남 민법과 국가배상책임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3. 준거법

피고 주장 : 국제사법 제5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 아닌, 1968. 2. 불법행위 당시 남베트남 민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주장 : 국제사법 제21조 제1항 소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은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대한민국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 성격)이므로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리가 준거법이 되어야 함(대법원 2017다218895 참조).

재판부 판단 :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은 베트남으로, 그 곳에서의 법의식(당시 해당 지역의 정부 상황을 보면 ‘남베트남법’이 되고,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베트남법’이 된다)을 기준으로 판단,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인 원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남)베트남법의 적용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이러한 준거법 선택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지법에 따른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남베트남법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어떤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법원이 직권 조사를 다 해도 외국법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고,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 대원칙에 따라 외국관습법의 의하고, 외국관습법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조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조리의 내용이 현행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이나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4. 대한민국 소속 군인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는지 여부

피고 주장 : 베트남이 한국군인으로 위장하였거나 북한 심리전 부대의 개입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국 군복을 입었으며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한국군임을 알 수 있었다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자가 한국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고 주장 : 원고 진술, 이 사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 신문, 제출된 베트남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1중대 소대장들의 녹취록 및 인터뷰 기사, 파월한국군전사, 주월미군감찰보고서(여

기에 첨부된 주월미군, 남베트남 민병대원들, 목격자들의 진술서 및 미군이 직접 찍은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면 풍니 사건은 한국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행위라는 점, 그 과정에서 원고 가족들이 살해되고 원고도 복부에 총상을 입은 점이 인정됨. 특히,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풍니 사건이 자신의 부대원 중 일부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인정하는 증거가 존재. 또한 풍니 사건에 대해 1968. 4.경 헌병대에서, 1969. 11.경 중앙정보부에서 각각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나, 피고는 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는 피고 역시 풍니 사건이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재판부 판단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의 이 사건 1 중대 소속 성명 불상의 군인이 집 내부의 방공호에 무장 없이 숨어 있던 원고의 이모, 어린 나이의 원고와 언니, 오빠, 남동생 등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직후에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찔러 원고와 원고의 오빠(응우옌 득 상)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가족(이모, 언니, 남동생, 4촌 동생)들을 모두 죽이고, 원고와 원고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원고의 어머니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한 곳으로 모아 놓고 그곳에서 사살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 주장 : 만약 한국군인들이 민간인을 살인·상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전쟁은 게릴라전의 특수성이 있는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고 주장 : 교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 민간인 거주지역의 수색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학살된 사람 중 상당수가 아이·노인·여성이라는 점, 당시 작전을 수행한 참전군인들이 일관되게 마을 주민들의 저항이나 공격행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풍니 사건 학살의 양태가 마을 주민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 근거리에서 총격을 가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특히 원고의 경우 8세 아동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군인들의 불법행위는 교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 등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

재판부 판단 :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 2. 12. 풍니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할 당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베트남 또는 그 동조세력으로 취급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방공호에 있던 원고나 원고의 가족, 친척이 무장을 하였다거나 무장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건의 생존자, 목격자, 이 사건 1중대원, 미 해병대 연락병의 각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비무장 상태에서 이 사건 1중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받았고, 그렇게 총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영유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말로 베트남 내지 그 동조세력이었고 이 사건 1중대가 교전 중에 이들을 사살한 것이라면, 이 역시 작전 수행 중에 얻은 전과여서 파월한국군전사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1968. 2. 12. 이 사건 1중대의 작전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

급도 되어 있지 않다. 이는 풍니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적과의 교전 중 발생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 6. 소멸시효

피고 주장 : 불법행위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원고 주장 : 본 사건은 문경 학살 사건(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및 미군 위안부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인정하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재판부 판단 :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2019. 4. 4. 피고를 상대로 진상조사와 피해회복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9. ‘국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주월한국군은 풍니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68. 4.경 헌병대 수사관을 통해서 1중대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을 ‘한국군으로 변장한 베트남들의 소행’이라는 취지로 조사하도록 하여 진상을 은폐하는 조치를 하고(갑 제18호증), 이어 1968. 6.경 주월한국군 사령관(채명신 장군) 명의의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군으로 변장한 베트남들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피고는 1969년에 수사기관(중앙정보부)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거부는 물론 진상조사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 “‘전쟁 등의 시기에 군인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저지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는 은폐되기 쉽고, 통상의 법절차에 의한 구제가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피고의 위와 같은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최근까지도 이 사건의 가해 부대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 5. 이 사건 판결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각 정부의 반응

### 가. 이 사건 판결을 환영한 베트남 정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은 베트남 정부였다.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날인 2023년 2월 7일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풍니·풍넛 학살은 20세기 말 외국 군대가 베트남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많은 학살 중 하나”, “한국의 판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무척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베트남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는데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진 않지만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보장한다’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사실상 환영의 입장이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있어서 베트남 정부의 소극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를 닫고 미래로 나간다’는 베트남 정부의 과거사-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관된 기조로서 평가된다(한성훈, 2018). 이 때 ‘과거를 닫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과거에 대한 망각’이나, ‘면책’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다. 실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 발언을 예의주시해왔으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도 했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베트남 정부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위와 같은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아닌 피해자들 본인의 권리행사라면 허용하겠다는 태도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베트남 피해자들의 한국 내 권리행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도 기존 입장에서 일정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 나. 한국 정부의 불복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비판

한국 정부의 반응은 베트남 정부와 정반대였다. 법원에서 인정된 학살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고 열흘이 지난 2월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증인도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 문제의 주무부처 장관이 개별적 증거관계까지 언급하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 ‘전혀’ 없었다고 단언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위 발언 과정에서 “미군 조사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틀린 이야기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주월미군감찰보고서의 결론은 ‘conclusion : none’, 즉 ‘결론 없음’이다. ‘학살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다. 위 보고서에는 ① 풍니 마을 주민들, 남베트남 군인, 미군들의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② 주월한국군이 학살을 부정하는 답변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미군의 동맹군인 한국군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최종결론을 유보한 것일 뿐, 보고서에는 한국군에 의한 학살을 입증하는 증거들로 가득하고, 법원 역시 이를 한국 정부의 학살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결문에 설시했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법원 판결에 국방부가 즉시 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대한민국 입법부가 이 사건 판결 나아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 단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 의원은 “이번 판결로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정치적 세력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우리 국군에 대한 의혹을 일본 강점기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월남전 파병은 공

18)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하면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같은 달 1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양국 우호와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라고 항의했다.

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운 것으로 당시 정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진실규명을 통해서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를 헐뜯으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제해 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은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의로운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부수적 피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송은 참전군인들을 명예를 헐뜯으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활동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2023년 3월 9일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접수했다.<sup>19)</sup> 항소장 접수 이전에도 이미 국방부의 불복 입장이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한국 내에서는 특별한 이슈로 다뤄지진 않았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항소’라는 행위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응했다.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항소한 당일인 3월 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문제의 객관적인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의 항소를 사실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해 비판한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교부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옹호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확인된 베트남 정부 입장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보장(용인)함을 넘어서서 그 권리행사에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행위(불복-항소)에 대응하여 베트남 정부 역시 항의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이며, 나아가 베트남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를 닫고 미래로 나가자’라는 입장이 “과거를 청산하되 진실을 부정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구체적으로 부연해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 6. 마치며 :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가능성

- 이 사건 판결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인정이자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까지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
-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사회변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1심 판결이기에 확정되어야만 그런 역할이 가능한가? 부족한 운동역량이나 미온적 사회적 여론(인식) 속에서 사법적 판결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고, 결국 고립되어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비판적인가?
- 공식적인 진실규명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진화위의 포괄적인 직권조사 결정 또는 별도 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함. 그러나 그 방식 모두 추동할 동력은 확인되지 않음.

## 참고문헌

Phạm Ngọc Diệu. 2006.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한국단체들의 활동과 베트남의 반응」. 성공회대학교 석

19) 현재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사학위논문.

- 고경태. 2015.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풍니·풍넛 학살 그리고 세계』. 한겨레출판.
- 고경태. 2016. 『한마을 이야기: 한국, 베트남, 풍니·풍넛 고경태의 기록』. 보림출판사.
- 구수정. 2000. 「현장보고: 20세기 광기와 야만이 부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으로 반전·평화·인권의 시대를 열자」. 한국인권재단 엮음.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 권현익. 2012. 『학살, 그 이후』. 유강은 옮김. 아카이브.
- 김종옥. 2017.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 청룡여단의 괴룡1호 작전에 관한 연구: 풍넛-풍니 양민학살사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1): 957-978.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엮음.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자료집」.
- 윤충로. 2015. 「한국의 베트남 전쟁 기억의 변화와 재구성: 1999년 『한겨레21』 캠페인과 그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5: 7-40.
- 임재성. 2018a. 「눈부셨던 응우예티탄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시민평화법정이 남긴 것들」, 『문학3』.
- 임재성. 2018b. 「학살의 증거에서 권리의 주체로」.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 한성훈. 2018. 「하미마을의 학살과 베트남의 역사 인식: 위령비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다」. 『사회와 역사』 118: 273-305.